

의안번호	제461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18회)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제안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3월 15일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61
----------	-----

제안 연월일 : 2013. 3. 15.
제 안 자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주 문

- 수도권 과밀집중 및 지역 불균형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균형발전정책과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한 우려 표명
- 도의회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및 대정부 대응활동에 주도적 선도적 역할과 민·관·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역량결집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해 나갈 것을 결의

□ 제안이유

- 새 정부 출범 및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 더욱 부각
-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촉구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하여 도의회에서 지역 역량결집 및 주도적이고 선도적 역할 필요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세종시·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수도권 과밀집중 및 지역불균형이 해소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함께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추진과 병행하여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실상 철폐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방분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세 차례나 입법예고를 반복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도의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균형발전·지방분권 추진체계의 조속한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며, 대정부 대응활동에 주도적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 노력하는 한편, 열린 자세와 굳은 결의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민·관·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차원 못지않게 충북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충청북도와 시·군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3년 3월 15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